

영세 음식점 배달비·전기료 지원... 정책자금 상환 5년 연장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대한 대출프로그램 요건 대폭 완화 NCB 839 → 919점 이하까지 확대 임대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 경감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본격 추진한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신설한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한 프로그램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지원하고 임차료를 낮춘 건물주 등 임대인에게 세제를 지원한다.

20만원의 전기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을 더욱 늘린다.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나가는 정책자금 가운데 대

소상공인 종합 지원대책 주요내용

경영 부담 완화	성장 촉진 지원	재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지원 3종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 - 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 - 저금리 대한대출 요건 완화 ● 배달·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 - 인건비 절감 스마트기술 지원 ● 매출채권 팩토링 우선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보급 ●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진공·중진공 연계해 최대 7억원 정책자금 지원 ● 해외진출·판로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소핑몰 입점, 현지화 지원 - 소상공인 유망 소비재 수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출발자금 규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조원 → 40조원+θ ●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리턴패키지, 국민취업지원 제도로 교육·직업훈련 수당 지급 -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사업주에게 1년간 30~60만원 지급 ● 재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철거비 확대(최대 400만원)

자료/기획재정부

중채무, 신용점수 하락 등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빌린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 더 연장기로 했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도 기존엔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원 이상만 가능하던 것을 업력·대출잔액 기준을 폐지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신설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 저신용자의 경우 산출보증료율에서 0.2%p를 낮춰준다. 은행 외에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대한대출 프로그램 요건도 8월부터 완화한다. 신용도는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대출은 대책 발표 시점(7월3일) 이전에 받은 것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대출유형도 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사업용도의 가계대출(1000만원 이내)까지 포함한다.

이외에 3000만원 한도의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현재 NCB 744점 이하에서 NCB 839 이하까지 늘리고, 올해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최

대 6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5대 고정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선 플랫폼 기업들과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배달료를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이달 중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를 새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적용한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 기간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늦춘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재산가액 3→1%) 지원기간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하고, 지자체와 협의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하던 20만원 지급 대상도 현재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까지 늘려 최대 50만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음식점 등에서 인건비를 줄이기위해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을 확대한다. 또 음식점에서 E-9 비자 외국인력을 주방보조원 등으로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역, 업력 요건 등에 따라 고용허가 범위를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Scale-up)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시 소진공(최대 2억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최대 5억원)을 연계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선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자금 규모를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대폭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尹 "현금 나눠주는 '포퓰리즘 형식' 아냐"

'하반기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새출발자금 대상 30만명 추가 지원 대기업 성장위한 단계별 규제 합리화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핵심 경제정책 과제를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마련했다며 이는 단순히 지원금을 배분하는 포퓰리즘 형식이 아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필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특히 "저금리 대한대출지원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

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낮춰드리겠습니다"고 약속했다.

또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기료, 임대료 부담도 완화에 드리겠다"며 "전기료 지원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의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깎아준 임대

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과 함께 재기 기회를 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자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서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 논의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

며 "산업 발전과 기술 변화에 발맞춰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다"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외식 물가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서예진 기자 syj@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고양특례시

고양행주산성, 일산호수공원, 북한산, 서심릉, 서오름, 서심릉